

우여곡절 끝 실증단지 착공 '눈앞'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1단계 준비 마무리...해상풍력 강국 '전초기지' 기대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이라는 포부를 안고 전북 부안-고창 서남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실증단지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환)와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사장 이봉순)에 따르면 60M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공사의 준비가 마무리돼 착공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혼란한 정국 탓에 5월 대신 이후로 착공식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서남해 해상풍력이 갖는 상징성과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

성이 증대되면서 4월 중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1단계 실증사업은 현대건설이 설계·조달·시공(EPC)을 수행하고, 두산중공업이 터빈을 공급한다. 해상변전소는 한전이 위탁받아 건설하고, 154kV 해저케이블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해안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해안가가 아닌 먼 바다에 건설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업계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저풍속형 탄소블레이드가 적용된 3MW급 대형터빈과 해상변전소 등 국내 최초 타이틀도 많다. 효성 중공업부문과 협의중인 5MW급 발전기 2기의 추가설치

까지 확정되면 5MW 해상풍력발전기 시대로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착공까지 걸림돌도 많았다. 2008년 정부가 국내 최초로 2.5GW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해상풍력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2011년 사업 본격 착수 이후 각종 인허가가 번번히 가로막히고, 주민 민원이 심화되면서 사업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와 이견, 국방부 레이다 영향평가 문제를 비롯해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구역 분쟁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던 8개 국내 터빈제조사 중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7개 기업이 풍력사업에서 손을 떼면

서 처음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등 내용도 겪었다. 결국 1단계 사업은 2019년 말이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도 60MW까지 축소됐지만 효성 중공업부문의 참여 여부에 따라 소폭 늘어날 여지도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부안에 상주 사무실을 설치하고 민원 수렴과 지역 동반성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물론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민 기자 pkm@



2017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이 한수원 부스에 마련된 APR-1400 3D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종원 원자력연경공단 이사장, 이관섭 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수원 사장), 윌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원자력 지속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달려있다”

원자력연차대회에서 전문가들 국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지적

원자력발전이 지속되려면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5,6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전 세계 원전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원자력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원자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발전소 내 임시저장소에 우선 저장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또는 영구처분까지 전까지 통상 50년 이상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한다. 이후 1000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영구처분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된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은 중간저장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 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9개국은 임시 저장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을 한 지역에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고준위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NUMO)의 케니치 가루 대외협력부장은 “일본은 이미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루 부장은 “화산지역, 활성단층 지역 등을 제외하고, 해상 운송 문제로 해안에서 20km 이내인 지역, 인구밀도와 토지소

유주의 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 신청사제가 없다”며 “지난 2007년 도야마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긴 했지만, 지

역주민들의 반대로 시장이 소환되고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결국 신청을 철회하게 이르렀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경주=정형석 기자 azar76@

성실과 신뢰로 = 유진M&A

- 전기공사 면허권 양도양수, 분할, 합병
-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 공사업 신규등록, 기업전환
-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문의 환영
- 일반, 전문건설업 신규 매매 정리 문의 환영

(주)유진엠앤에이 대표전화: 02-555-5887 팩스: 02-557-8003 www.umna.co.kr

제34차 출자금 증자 공고

■ 청 약 기 간: 2017. 4. 24(월) ~ 4. 26(수) (3일간)
■ 증자계획좌수: 120,000좌 내외
■ 1좌당 청약금액: 322,408원

■ 청 약 대 상: 전기공사업등록업체
■ 청 약 접 수 처: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

1. 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 총수: 4,727,261좌

2. 출자증권 1좌당 액면금액: 100,000원

3. 청약좌수

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치업체 및 전기공사업등록자: 200좌 이상

나. 증자를 원하는 기존 조합원: 희망좌수

4. 청약방법

가. 청약금: 청약금 전액 현금납입, 단, 청약기간내 청약금 환불은 인정하지 않음.

나. 청약금 납입과 정산: 청약서(조합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입, 날인하고 청약금과 함께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 또는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 후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예치금의 대체: 출자금예치자의 예치금은 청약개시일에 청약금으로 대체하며 그 차액에 대하여 청약기간중 추가납입 또는 환불함.

라. 청약금의 대체: 청약금은 출자금전환일에 출자금으로 대체됨.

마. 청약금의 이자: 청약금에 대한 이자는 출자금전환일까지 무이자로 하며, 예치금을 청약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5. 출자금전환일: 2017년 4월 27일 (목)

6. 청약좌수 배정방법

가. 조합원 1인당 출자는 총 출자좌수(4,727,261좌)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약좌수대로 배정함.

나. 청약결과 배정된 좌수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생략함.

■ 지점 및 출장소

지점	서울 02)6936-9500	광주 062)361-5502~3	의정부 031)826-0353~4	전주 063)246-9086~7	포항 054)281-2971~2	강릉 033)647-3057~8
	부산 051)817-0571~2	대전 042)632-0382~3	춘천 033)263-9461~2	창원 055)293-2108~9	안동 054)853-3257~8	진주 055)759-8718~9
	대구 053)353-9003~4	울산 052)266-6714~5	청주 043)211-9024~5	제주 064)757-7136~7	목포 061)277-5502~3	
	인천 032)431-2283~4	수원 031)238-5803~4	홍성 041)631-0383~4		순천 061)751-23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논현동,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성관